

기본소득, 충남도민의 생각을 묻다.

박 경 철

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책임연구원

kcpark@cni.re.kr

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충청도민의 생각을 알아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음

CONTENTS

1. 설문조사 배경 및 개요
2. 긴급재난지원금 등 평가
3. 기본소득 인식 및 선호도
4.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방향
5. 결론 및 시사점

요약

-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충청도민의 인식과 방향을 알아보고자 함
 -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 차원에서 실시한 긴급재난지원금(재난기본소득)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향후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도민의 의견을 살펴봄
 - 설문조사는 도민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설문내용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평가,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과 찬반 여부, 충남도 아기수당(행복키움수당)과 농어민수당에 대한 인식과 평가, 그리고 청년수당(청년기본소득)에 대한 찬반 여부임
- 주요 설문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
 -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100.0% 수령을 했으며 만족도는 높으며 2차 지급에는 찬성이 반대보다 높음
 -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도가 높지 않으며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찬성보다 반대가 높으며 그 주된 이유로는 국가재정 부담을 꼽음
 -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기수당(행복키움수당), 농어민수당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에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
 - 기본소득은 대안적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인 만큼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협력적 노력 필요

01

설문조사 배경 및 개요

1. 설문조사 배경

● 코로나19가 촉발한 기본소득 논쟁

-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서민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‘재난기본소득’ 도입 논쟁이 급부상함
- ‘재난기본소득’을 찬성하는 쪽은 재난이라는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두에게 공평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함
- ‘재난기본소득’을 반대하는 쪽은 재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난 피해를 많이 입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야한다고 주장함. 이는 복지정책에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논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
- 결국 정부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모든 가구에 40~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초보적인 형태의 기본소득을 도입함

● 기본소득은 보편성, 무조건성, 개별성을 원칙으로 함

-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(정치공동체)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임(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)
- 기본소득은 3대 원칙을 가짐. 첫 번째는 보편성임. 즉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임, 두 번째는 무조건성임. 즉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하는 것임. 세 번째는 개별성임.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임. 이외에도 정기성과 현금성을 더해 5원칙으로 불리기도 함
- 기본소득은 이와 같은 원칙을 담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형태로 변형되고 실행되고 있음. 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민수당,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수당(청년기본소득), 아이들에게 주는 아기수당 등임. 이들 수당 및 부분적 기본소득을 참여소득 또는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불림

●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첨예한 이유는 사회불평등(양극화)의 심화, 선별복지의 한계, 4차산업혁명, AI(인공지능) 시대 일자리 감소 때문임

- 전통적으로 기본소득은 진보 진영의 의제였으나 지난 제21대 총선 이후 보수 야당진영에서 먼저 기본소득 의제를 꺼냈듯이 기본소득은 좌우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서 큰 화두로 등장함. 이러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음
- 첫째, 사회불평등의 심화임. 신자유주의의 확대로 인해 정부의 분배의 역할은 줄어들고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일관함으로써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격차는 악화됨. 특히 자본수익이 노동수익을 월등히 앞서면서 노동자, 농민의 박탈감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
- 둘째, 선별복지의 한계임.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복지는 일견 타당하나 복지를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. 먼저, 복지의 대상을 선별하는 데 많은 예산이 투입됨. 두 번째, 복지수혜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적 모멸감을 줌. 세 번째, 복지수혜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존재함. 네 번째, 취약계층만 복지의 혜택을 받는다면 그렇지 않는 계층에 대한 증세를 유인하기 어려움.
- 셋째, 4차산업혁명, AI(인공지능) 시대 일자리의 감소임.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4차산업혁명과 AI의 확산으로 대량의 일자리 감소를 전망함. 이 때문에 빌 게이츠, 일론 머스크 등 IT업계의 CEO 등도 대량의 일자리 감소시대를 대비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제기함
- 넷째,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의식의 확대임. 세계인권선언 등 여러 인권선언과 헌법 등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의 확대로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. 즉,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생존권 차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됨

● 기본소득에 반대 혹은 부정적 시각도 상당함

- 기본소득은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혹은 부정적 시각도 상당히 존재함. 그 대부표적 이유는 다음과 같음
- 첫째, 재정의 부족임. 기본소득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어렵다는 의견임. 정부의 재정은 한정적인데 상당부분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면 정부의 재정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임
- 둘째, 현금성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임.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자칫 정치인의 포퓰리즘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임

- 셋째, 정부의 비대와 의존성 심화임.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정치공동체 즉, 정부가 지급하기 때문에 기본소득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정부의 권한이 클 수밖에 없음. 또한 현금성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도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음
- 넷째, 근로의욕 감소임. 정부가 국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국민들은 근로의욕이 떨어져 전반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것으로 우려함

[표 1] 기본소득의 주요 찬성 및 반대 이유

찬성 이유	반대 이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회불평등 및 소득불안 해소 ■ 복지사각지대 해소 ■ 4차산업혁명, AI시대 일자리 감소 대응 ■ 인간의 기본 생존권 보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재정 부족 ■ 현금성 포퓰리즘 만연 ■ 정부의 비대와 의존성 심화 ■ 근로의욕 감소

● 기본소득에 대한 충남도민의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 방향 제시 필요

- 기본소득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호도가 극명하게 나뉘는 경향이 있음.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어느 정도 존재함
- 충남도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2019년부터 아기수당(현 행복키움수당)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농가당 80만 원의 농어민수당 등을 도입함.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한 초보적인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음
- 현재 국내외 많은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고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도입 논쟁이 확대됨에 따라 충남도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
-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충남도민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충남도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

2. 설문조사 개요

● 본 연구의 설문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음

[표 2] 설문조사 개요

구분	내용
조사목적	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한 기본소득에 대한 도민의 생각을 파악해 향후 충남도 기본소득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
조사지역	충청남도 전체 15개 시·군
표본크기	320명
조사 내용	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항,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, 충남형 기본소득 제 관련 사항
자료수집방법	일대일 개별 면접조사
조사대상자	충남도내 거주하는 성인
조사기간	2020. 07. 06. ~ 2020. 07. 25(20일간)

3. 설문 대상자 일반 현황

- 설문대상자는 총 320명이며 성별, 거주지별, 연령별, 학력별, 직업별 분포는 다음 [표 3]와 같음

[표 3] 설문대상자 일반현황(n=320)

구분(빈도)		비중	구분	비중	
성별	남자=160	50.0%	학력	고졸이하=145	45.3%
	여자=160	50.0%		대학 재학·중퇴/전문대졸=70	21.9%
거주지	읍·면 지역 (농촌 지역)=166	51.9%	직업	대졸 이상=105	32.8%
	동지역(도시지역)=154	48.1%		농어업=44	13.8%
연령	20대=46	14.4%		사무/관리직=54	16.9%
	30대=75	23.4%		서비스/판매직=55	17.2%
	40대=77	24.1%		생산직 =25	7.8%
	50대=74	23.1%		공무원/전문직/공공기관	6.3%
	60대 이상=8	15.0%		종사자=20	16.9%
결혼	미혼=81	25.3%		자영업=54	16.9%
	기혼=234	73.1%		대학생/대학원생=15	4.7%
	기타=5	1.6%		취업준비=17	5.3%
			주부=35	10.9%	
			기타=1	0.3%	

02

긴급재난지원금 등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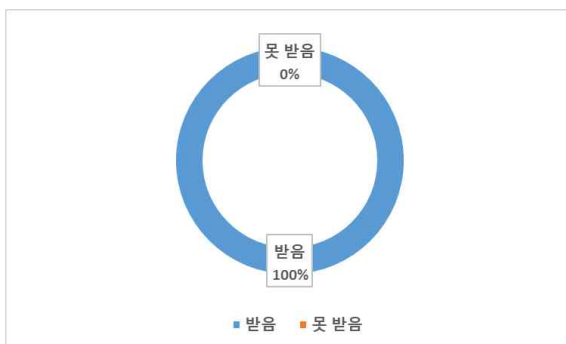
1.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조사 결과

● 응답자 모두 긴급재난지원금 수급

-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 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기본 소득 형태로 처음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응답자 모두는 이를 수급한 것으로 나타남

●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적 지원보다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을 선호

-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과정에 국민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
- 이에 대한 응답자의 59%는 전 국민 동일 지급을 선호했고, 40%는 선별적 지급을 선호함. 나머지 1%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



[그림 1]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여부



[그림 2]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선호도

●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젊은 층일수록 전 국민 동일 지급을 선호함

- 연령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선호도를 보면, 20대의 73.9%가 전 국민 동일 방식 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. 다음으로 40대는 71.4%, 30대는 54.7%로 나타남. 젊은 층일수록 전 국민 동일 지급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
- 50대는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 지급이 52.7%로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선별 지급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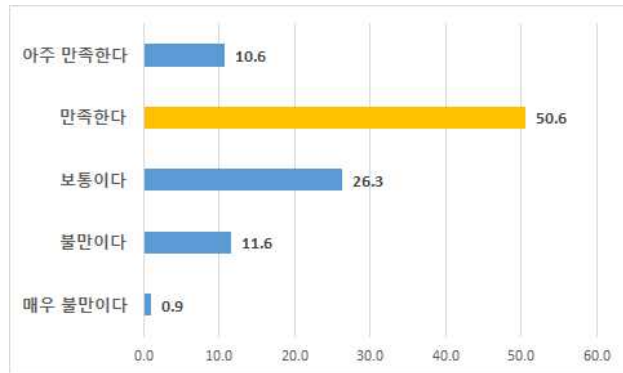
[표 4] 연령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선호 방식

구분			지급 방식			전체
			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 지급	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	잘 모름	
연령	20대	빈도	12	34	0	46
		%	26.1%	73.9%	0.0%	100.0%
	30대	빈도	34	41	0	75
		%	45.3%	54.7%	0.0%	100.0%
	40대	빈도	22	55	0	77
		%	28.6%	71.4%	0.0%	100.0%
	50대	빈도	39	35	0	74
		%	52.7%	47.3%	0.0%	100.0%
	60대 이상	빈도	21	25	2	48
		%	43.8%	52.1%	4.2%	100.0%
전체		빈도	128	190	2	320
		%	40.0%	59.4%	0.6%	100.0%

$\chi^2=25,810, p=0.001$

●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응답자의 61.2%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

-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응답자의 50.6%는 만족한다, 10.6%는 아주 만족한다고 응답함. 이 둘을 더하면 응답자의 61.2%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
- 나머지 '보통이다'는 응답은 26.3%이고 '불만이다'는 응답을 11.6%에 달함



[그림 3]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만족도

-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직업군은 서비스/판매직, 취업준비생, 주부 등 순으로 나타남
 - 직업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만족도(만족한다+아주 만족한다)를 보면, 서비스/판매직이 72.7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다음으로 취업준비생이 70.6%, 주부 68.6%, 자영업 61.1% 순으로 나타남
 -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,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직업군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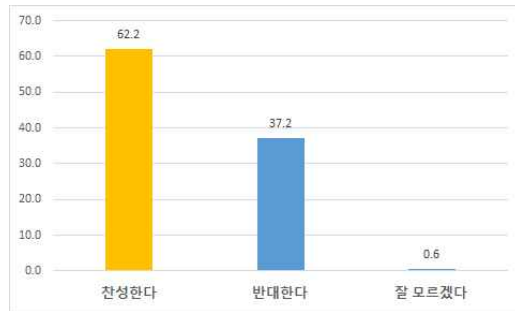
[표 5] 직업별 긴급재난지원금 만족도

구분		만족정도					전체	
		매우 불만이다	불만이다	보통이다	만족한다	아주 만족한다		
직업	농어업	빈도	1	0	18	21	4	44
		%	2.3%	0.0%	40.9%	47.7%	9.1%	100.0%
	사무/관리직	빈도	1	3	19	27	4	54
		%	1.9%	5.6%	35.2%	50.0%	7.4%	100.0%
	서비스/판매직	빈도	0	8	7	33	7	55
		%	0.0%	14.5%	12.7%	60.0%	12.7%	100.0%
	생산직	빈도	0	3	8	13	1	25
		%	0.0%	12.0%	32.0%	52.0%	4.0%	100.0%
	공무원/전문직/공공기관 종사자	빈도	0	4	7	8	1	20
		%	0.0%	20.0%	35.0%	40.0%	5.0%	100.0%
	자영업	빈도	0	10	11	27	6	54
		%	0.0%	18.5%	20.4%	50.0%	11.1%	100.0%
	대학생/대학원생	빈도	0	2	5	5	3	15
		%	0.0%	13.3%	33.3%	33.3%	20.0%	100.0%
	취업준비	빈도	0	3	2	6	6	17
%		0.0%	17.6%	11.8%	35.3%	35.3%	100.0%	
주부	빈도	1	4	6	22	2	35	
	%	2.9%	11.4%	17.1%	62.9%	5.7%	100.0%	
전체	빈도	3	37	83	162	34	319	
	%	0.9%	11.6%	26.0%	50.8%	10.7%	100.0%	

$\chi^2=47,621, p=0.037$

●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응답자의 62.2%가 찬성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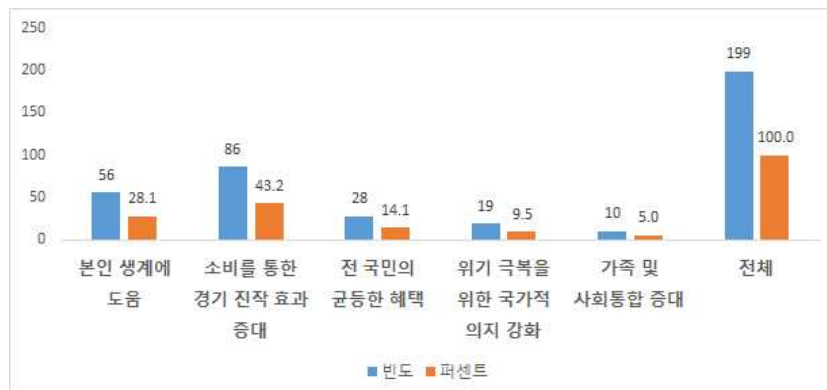
-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한 차례만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. 따라서 2차 지급에 대한 설문결과, 응답자의 62.2%는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는 37.2%에 달함. 나머지 0.6%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
-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충청도민의 3명 중 2명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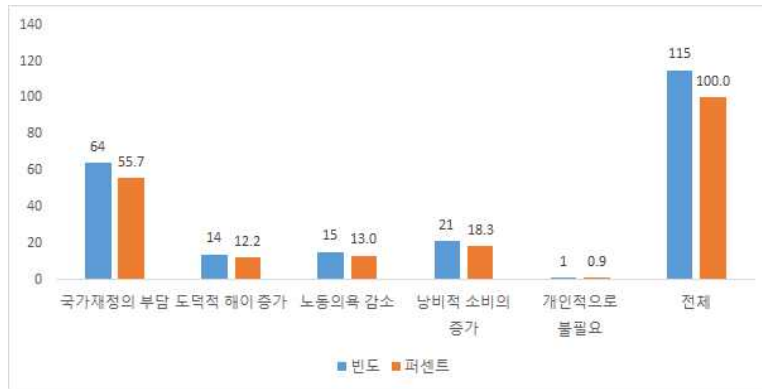
[그림 4] 2차 긴급재난지원금 찬반 여부

●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찬성의 가장 큰 이유는 ‘소비를 통한 경기 진작 효과 증대’이고 가장 반대하는 이유는 ‘국가 재정의 부담’을 꼽음

-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‘소비를 통한 경기 진작 효과 증대’가 43.2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‘본인 생계에 도움’이 28.1%, ‘전 국민의 균등한 혜택’이 14.1%로 나타남
-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‘국가 재정의 부담’이 55.7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‘낭비적 소비의 증가’가 18.3%, ‘노동의욕 감소’가 13.0%, ‘도덕적 해이 증가’가 12.2%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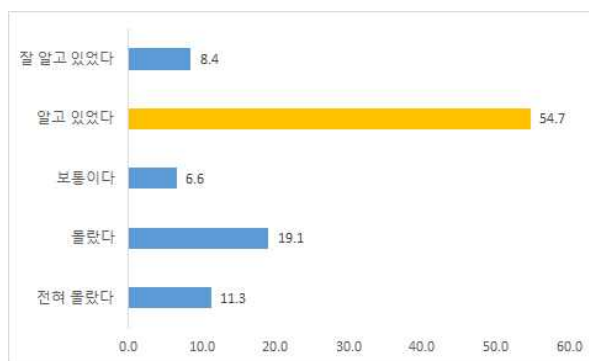
[그림 5] 2차 긴급재난지원금 찬성 이유



[그림 6] 2차 긴급재난지원금 반대 이유

2. 충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¹⁾ 관련 조사 결과

- 충남도 자체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63.1%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충남도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피해를 많이 본 소상공인, 실직자, 운수업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 바 있음
 - 이에 대해 응답자의 54/7%는 '알고 있었다'고 응답했고, 8.4%는 '잘 알고 있다'고 응답함. 이 둘을 더하면 조사대상자의 63.1%는 충남도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반면, 응답자의 19.1%는 '몰랐다'고 응답했고, 11.3%는 '전혀 몰랐다'고 응답함



[그림 7] 충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인지 여부

1)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실직자, 저소득층, 운수업체 종사자, 비정규직종사자, 특수형태 근로자, 프리랜서 등 도민 약 15만 명에게 100만 원씩 총 1,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임

● 충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응답자의 16.3%는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

- 중앙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응답자는 100.0% 혜택을 받았으나 충남도가 지급한 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16.3%만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
- 이는 중앙정부는 보편적 성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반면, 충남도는 취약계층에 더 집중해 지원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. 다만, 취약계층에 집중해 지원하더라도 16.3%는 다소 적은 것으로 판단됨



[그림 8] 충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수혜 여부

03 기본소득 인식도 및 선호도

1. 기본소득 인식도

- 기본소득(basic income)에 대해 응답자의 38.4%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응답자의 38.4%는 '알고 있다(+잘 알고 있다)'고 응답했고, 50.2%는 '모른다(+전혀 모른다)'고 응답함
 - 기본소득 논쟁이 우리 사회 중요 화두로 논의되고 있지만 충남도민은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



[그림 9] 기본소득 인지 여부

- 기본소득(basic income)에 대해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인지하고 있음
 - 지역별 기본소득 인지도 조사결과, 농촌지역(읍·면) 응답자의 32.5%가 '알고 있다'고 응답했고, 도시지역(동 지역) 응답자는 44.8%가 '알고 있다'고 응답함

[표 6] 지역별 기본소득 인지도

구분			인지 정도					전체
			전혀 모른다	잘 모른다	보통이다	알고 있다	잘 알고 있다	
지역	읍·면 지역	빈도	38	59	15	50	4	166
		%	22.9%	35.5%	9.0%	30.1%	2.4%	100.0%
	동 지역	빈도	19	48	18	62	7	154
		%	12.3%	31.2%	11.7%	40.3%	4.5%	100.0%
전체		빈도	57	107	33	112	11	320
		%	17.8%	33.4%	10.3%	35.0%	3.4%	100.0%

$\chi^2=9.404, p=0.052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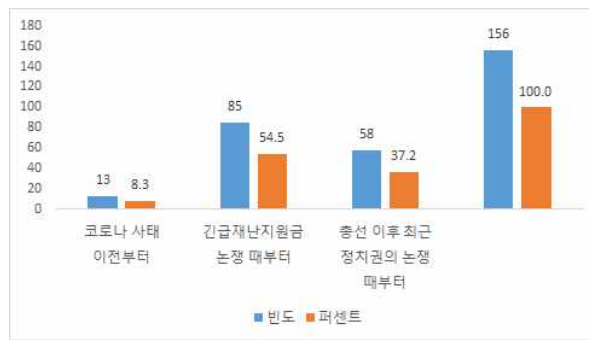
- 기본소득(basic income)에 대해 40대, 30대, 20대가 타 연령대보다 더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연령별 기본소득 인지도 조사 결과, 40대가 45.5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다음으로 30대가 44.0%, 20대가 43.4%로 비슷하게 나타남. 반면, 60대는 16.7%로 가장 낮았고, 50대는 36.5%로 나타남
 -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40대-30대-20대-50대-60대 이상 순으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

[표 7] 연령별 기본소득 인지 정도

구분			인지 정도					전체	
			전혀 모른다	잘 모른다	보통이다	알고 있다	잘 알고 있다		
연령	20대	빈도	9	14	3	18	2	46	
		%	19.6%	30.4%	6.5%	39.1%	4.3%	100.0%	
	30대	빈도	8	22	12	28	5	75	
		%	10.7%	29.3%	16.0%	37.3%	6.7%	100.0%	
	40대	빈도	11	22	9	32	3	77	
		%	14.3%	28.6%	11.7%	41.6%	3.9%	100.0%	
	50대	빈도	10	29	8	26	1	74	
		%	13.5%	39.2%	10.8%	35.1%	1.4%	100.0%	
	60대 이상	빈도	19	20	1	8	0	48	
		%	39.6%	41.7%	2.1%	16.7%	0.0%	100.0%	
	전체		빈도	57	107	33	112	11	320
			%	17.8%	33.4%	10.3%	35.0%	3.4%	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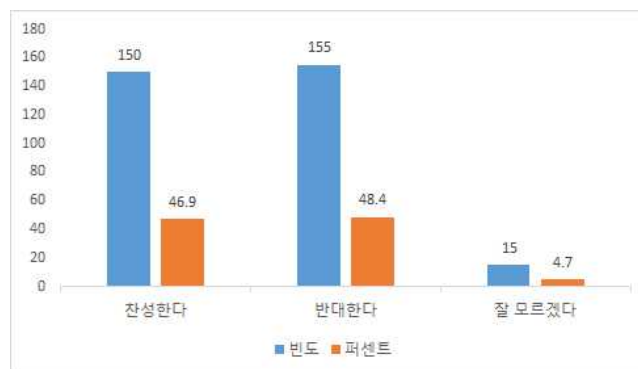
$\chi^2=36,290, p=0.003$

- 기본소득(basic income) 인지 시점은 ‘긴급재난지원금 논쟁 때부터’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
 -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학계의 연구와 논쟁은 꽤 되었지만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성남시의 청년배당부터라고 할 수 있음.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용어라고 할 수 있음
 - 기본소득 인지 시점에 대해 응답자의 54.5%는 ‘긴급재난지원금 논쟁 때부터’라고 응답했고, 다음으로 ‘총선 이후 최근 정치권의 논쟁 때부터’라는 응답은 37.2%로 나타남
 - 따라서 응답자의 91.7%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본소득을 안 것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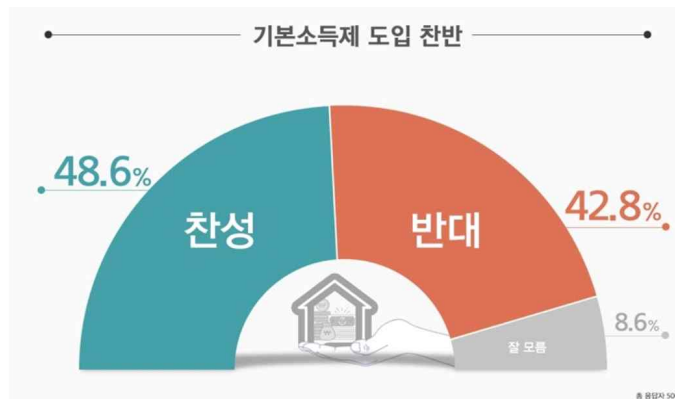
[그림 10] 기본소득 인지 시점

- 기본소득(basic income)에 대해 응답자는 찬성 46.9%. 반대 48.4%로 반대가 다소 높게 나타남
 - 기본소득에 대해 응답자의 46.9%는 찬성하고, 48.4%는 반대해 반대가 찬성보다 1.5%p 높은 것으로 나타남.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음. 이에 반해 ‘잘 모르겠다’는 응답은 4.7%로 나타남



[그림 11] 기본소득 찬반 여부

- 리얼미터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본소득 도입 찬반 조사 결과 찬성 48.6%, 반대 42.8%로 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남²⁾
- 찬반 이유를 보면, ‘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’이 48.6%로 가장 많았고, ‘국가 재정 부담되어 반대’가 42.8%로 가장 높게 나옴



[그림 12] 기본소득 도입 찬반 결과(뉴스한국, 2020. 06. 08)

● 기본소득(basic income)에 대해 20대의 찬성 비율이 54.3%로 가장 높게 나타남

- 연령별 기본소득 찬성 여부를 보면, 20대가 54.3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30대가 50.7%, 40대가 48.1%, 50대가 44.6%, 60대 이상이 35.4%로 나타남. 즉, 연령이 낮을수록 기본소득에 대해 우호적이고, 연령이 높을수록 기본소득이 비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남

[표 8] 연령별 기본소득 찬반 여부

구분	찬반 여부			전체		
	찬성한다	반대한다	잘 모르겠다			
연령	20대	빈도	25	21	0	46
		%	54.3%	45.7%	0.0%	100.0%
	30대	빈도	38	35	2	75
		%	50.7%	46.7%	2.7%	100.0%
	40대	빈도	37	34	6	77
		%	48.1%	44.2%	7.8%	100.0%
50대	빈도	33	39	2	74	
	%	44.6%	52.7%	2.7%	100.0%	
60대 이상	빈도	17	26	5	48	
	%	35.4%	54.2%	10.4%	100.0%	
전체	빈도	150	155	15	320	
	%	46.9%	48.4%	4.7%	100.0%	

$\chi^2=11.620, p=0.169$

2) 뉴스한국(2929,06.08): 리얼미터 “기본소득제 도입 찬반, 오차범위 내로 꽤 팽하게 맞서”
https://www.newshankuk.com/news/content.asp?news_idx=202006081310550103

● 기본소득(basic income)에 대해 중간 학력 계층(대학 재학·중퇴/전문대졸)에서 가장 많이 찬성함

- 학력별 기본소득 찬성 여부를 보면, 대학재학·중퇴/전문대졸 계층이 52.9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다음으로 대졸이 46.7%, 고졸 이하가 44.1%로 나타남.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졸 이하 계층에서 기본소득 찬성이 가장 낮은 것은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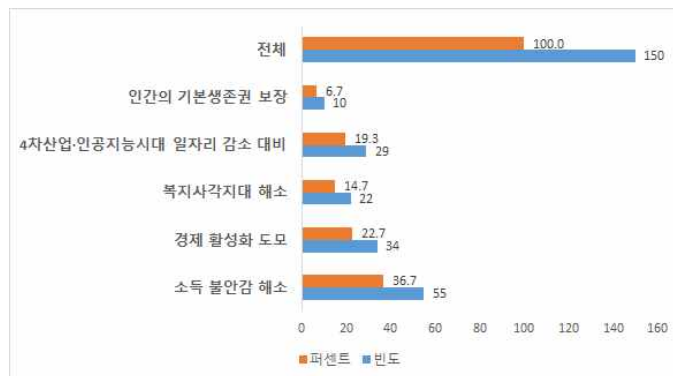
[표 9] 학력별 기본소득 찬반 여부

구분			찬반 여부			전체
			찬성한다	반대한다	잘 모르겠다	
학력	고졸 이하	빈도	64	74	7	145
		%	44.1%	51.0%	4.8%	100.0%
	대학 재학·중퇴/전문대졸	빈도	37	30	3	70
		%	52.9%	42.9%	4.3%	100.0%
	대졸 이상	빈도	49	51	5	105
		%	46.7%	48.6%	4.8%	100.0%
전체	빈도	150	155	15	320	
	%	46.9%	48.4%	4.7%	100.0%	

$\chi^2=1.451, p=0.835$

● 기본소득(basic income) 찬성의 가장 큰 이유는 ‘소득 불안감 해소’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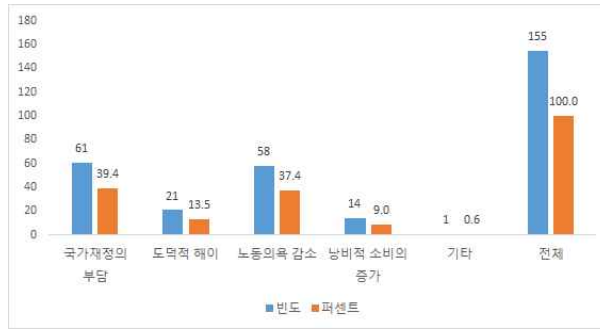
-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‘소득 불안감 해소’가 36.7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‘경제 활성화 도모’가 22.7%, ‘4차산업·인공지능시대 일자리 감소 대비’가 19.3%로 나타남. 즉,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인 소득, 경제활성화, 일자리가 기본소득 도입 찬성의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
- 초기 기본소득 논쟁에서 기본소득 도입의 주요 이유로 거론됐던 ‘복지사각지대 해소’는 14.7%, ‘인간의 기본생존권 보장’은 6.7%로 나타남



[그림 13] 기본소득 찬성 이유

● 기본소득(basic income)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‘국가재정의 부담’을 꼽음

-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‘국가재정의 부담’이 39.4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노동의
욕 감소’가 37.4%로 나타남. 대체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
- 반면, ‘도덕적 해이’는 13.5%, ‘낭비적 소비의 증가’는 9.0%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



[그림 14] 기본소득 반대 이유

● 전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는 ‘가능하지 않다’는 의견이 다소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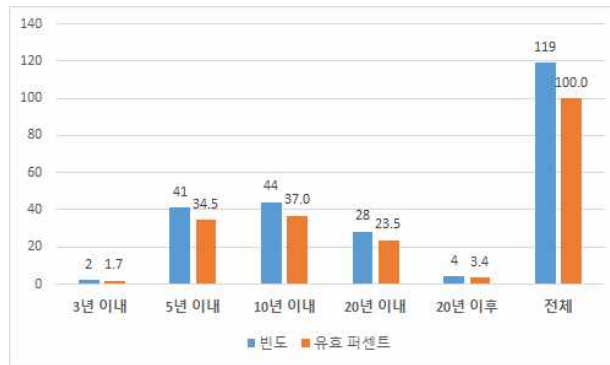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자의 48.1%는 ‘가능하지 않
다’고 응답했고, 37.2%는 ‘가능하다’고 응답함. ‘잘 모르겠다’는 응답은 14.7%로 나타남



[그림 15] 전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 가능성

●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향후 10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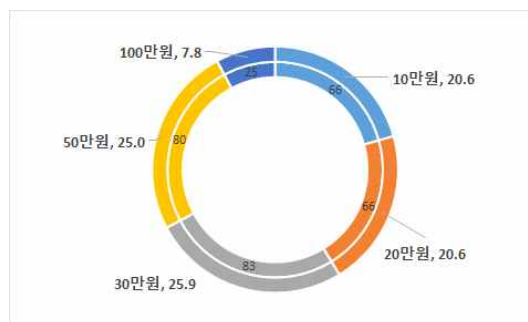
-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다면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년 이내는 1.7%, 5년 이내는 34.5%, 10년 이내는 37.9%, 20년 이내는 23.5%로 나타남
- 누적 통계치를 보면, 5년 이내는 35.2%, 10년 이내는 72.2%, 20년 이내는 95.7%로 나타남.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앞으로 20년 이내에는 거의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



[그림 16]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 가능 시기

● 전 국민 기본소득의 액수로는 월간 개인당 30만 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

-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이 시작된다면 국민 개인당 월간 얼마가 적당한지에 관한 질문에 30만 원과 50만 원이 각각 25.9%, 25.0%로 비슷하게 나타남
- 다음으로 10만 원과 20만 원이 공히 20.6%, 100만 원은 7.8%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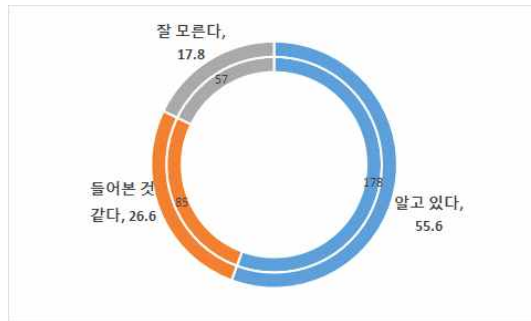
[그림 17] 전 국민 기본소득 적정 액수

04

충남도 기본소득 평가 및 방향

1. 아기수당(행복키움수당)

- 충남도 아기수당(행복키움수당)에 대해 응답자의 55.6%는 ‘알고 있다’고 응답함
 - 충남도가 현재 국가적 위기 중의 하나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의 생후 2년 동안 매월 10만 원의 아기수당(행복키움수당)을 지원하고 있음. 이에 대해 응답자의 55.6%는 ‘알고 있다’고 응답했고, 26.6%는 ‘들어본 것 같다’고 응답함. 충남도 아기수당(행복키움수당)에 대해 ‘잘 모른다’는 응답은 17.8%에 달함



[그림 18] 충남도 아기수당(행복키움수당) 인지 여부

- 충남도 아기수당(행복키움수당)에 대해 기혼자의 62.0%는 ‘알고 있다’고 응답함
 - 결혼 여부에 따른 충남도 아기수당(행복키움수당) 인지 여부 조사 결과, 기혼자의 62.0%는 ‘알고 있다’, 25.6%는 ‘들어본 것 같다’고 응답함. 이 두 응답을 더하면 응답자의 87.6%는 아기수당(행복키움수당)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반면, 미혼자의 경우는 ‘알고 있다’가 39.5%, ‘들어본 것 같다’가 28.4%로 나타남. 이 두 응답을 더하면 미혼자의 경우 아기수당(행복키움수당)에 대해 67.9%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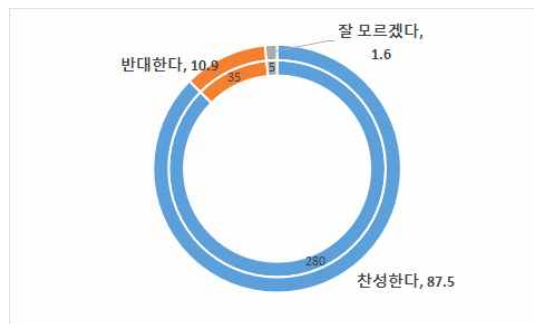
[표 10] 결혼 여부에 따른 아기수당(행복키움수당) 인지 여부

구분		인지 여부			전체	
		알고 있다	들어본 것 같다	잘 모른다		
결혼 여부	미혼	빈도	32	23	26	81
		%	39.5%	28.4%	32.1%	100.0%
	기혼	빈도	145	60	29	234
		%	62.0%	25.6%	12.4%	100.0%
	기타	빈도	1	2	2	5
		%	20.0%	40.0%	40.0%	100.0%
전체		빈도	178	85	57	320
		%	55.6%	26.6%	17.8%	100.0%

$\chi^2=21.654, p=0.000$

● 충남도 아기수당(행복키움수당)에 대해 응답자의 87.5%는 찬성함

- 충남도 아기수당(행복키움수당)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7.5%는 ‘찬성한다’고 했고, 10.9%는 ‘반대한다’고 함. ‘잘 모르겠다’는 응답은 1.6%로 아주 미미함



[그림 19] 충남도 아기수당(행복키움수당) 찬반 여부

● 충남도 아기수당(행복키움수당)에 대해 미혼자, 기혼자 모두 찬성이 압도적임

- 결혼 여부에 따른 충남도 아기수당(행복키움수당) 찬반 여부를 보면, 미혼자 86.4%, 기혼자 88.0%로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

- 이는 기성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서도 아기수당(행복키움수당)이 매우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

[표 11] 아기수당(행복키움수당) 찬반 여부

구분		찬반 여부			전체	
		찬성한다	반대한다	잘 모르겠다		
결혼 여부	미혼	빈도	70	10	1	81
		%	86.4%	12.3%	1.2%	100.0%
	기혼	빈도	206	25	3	234
		%	88.0%	10.7%	1.3%	100.0%
	기타	빈도	4	0	1	5
		%	80.0%	0.0%	20.0%	100.0%
전체		빈도	280	35	5	320
		%	87.5%	10.9%	1.6%	100.0%

$\chi^2=11.810$, $p=0.019$

2. 농어민수당

● 충남도 농어민수당에 대해 응답자의 45.3%는 ‘알고 있다’고 응답함

- 충남도는 2020년부터 농산물 시장개방과 기후변화 등으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가구당 연간 80만 원의 농어민수당 지급을 결정함. 이는 농어민의 기본생존권 보장, 농어업의 가치 유지,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임
- 이러한 충남도 농어민수당에 대해 응답자의 45.3%는 ‘알고 있다’, 22.5%는 ‘들어본 것 같다’고 응답함. 반면, ‘잘 모르다’는 응답은 32.2%에 달함



[그림 20] 충남도 농어민수당 인지 여부

● 충남도 농어민수당에 대해 응답자의 70.6%는 ‘찬성한다’고 응답함

- 충남도 농어민수당에 대해 ‘찬성한다’는 응답은 70.6%, ‘반대한다’는 응답은 24.7%에 달해 찬성이 반대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. ‘잘 모르겠다’는 응답은 4.7%에 달함.



[그림 21] 충남도 농어민수당 찬반 여부

● 충남도 농어민수당에 대해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찬성률이 높음

- 지역별 농어민수당 찬반 여부 조사결과, 농촌지역(읍면지역) 찬성률은 74.1%로 나타났고, 도시지역(동지역)은 66.9%로 나타남
- 도시지역에서도 충남도 농어민수당 정책에 찬성률이 비교적 높은 것은 이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 도 시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

[표 12] 지역별 농어민수당 찬성 여부

구분			찬반 여부			전체
			찬성한다	찬성한다	잘 모르겠다	
지역	읍·면 지역	빈도	123	36	7	166
		%	74.1%	21.7%	4.2%	100.0%
	동 지역	빈도	103	43	8	154
		%	66.9%	27.9%	5.2%	100.0%
전체		빈도	226	79	15	320
		%	70.6%	24.7%	4.7%	100.0%

$\chi^2=2.010, p=0.366$

● 충남도 농어민수당에 대해 고령일수록 찬성률이 높음

- 연령에 따른 충남도 농어민수당의 찬성률 보면, 20대는 58.7%, 30대는 64.0%, 40대는 64.9%, 50대는 79.7%, 60대 이상은 87.5%로 연령이 높을수록 농어민수당에 대해 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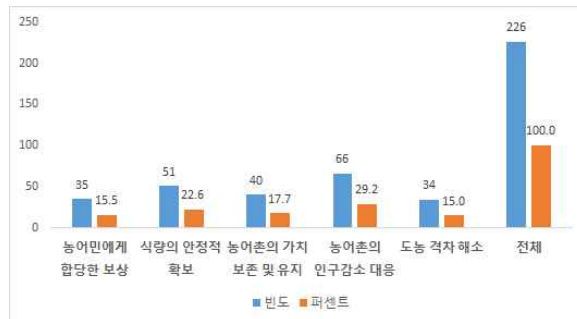
[표 13] 연령별 농어민수당 찬반 여부

구분			찬반 여부			전체
			찬성한다	반대한다	잘 모르겠다	
연령	20대	빈도	27	16	3	46
		%	58.7%	34.8%	6.5%	100.0%
	30대	빈도	48	23	4	75
		%	64.0%	30.7%	5.3%	100.0%
	40대	빈도	50	24	3	77
		%	64.9%	31.2%	3.9%	100.0%
	50대	빈도	59	11	4	74
		%	79.7%	14.9%	5.4%	100.0%
	60대 이상	빈도	42	5	1	48
		%	87.5%	10.4%	2.1%	100.0%
전체		빈도	226	79	15	320
		%	70.6%	24.7%	4.7%	100.0%

$\chi^2=16.973, p=0.030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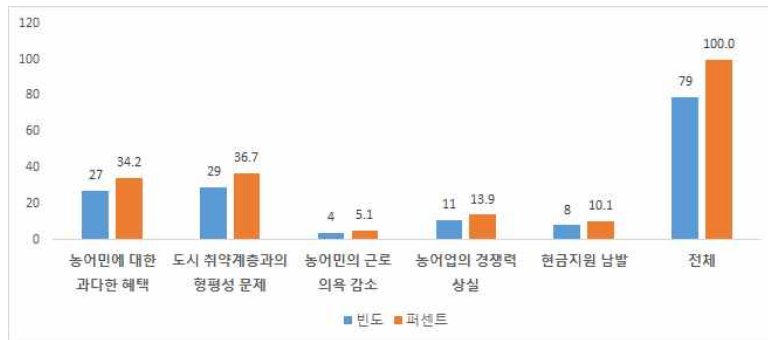
● 충남도 농어민수당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‘농어촌의 인구 감소 대응’으로 나타남

- 충남도 농어민수당을 찬성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, ‘농어촌의 인구감소 대응’이 29.2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‘식량의 안정적 확보’가 22.6%, ‘농어촌의 가치 보존 및 유지’가 17.7%, ‘농어민에게 합당한 보상’이 15.5%, ‘도농 격차 해소’가 15.0% 순으로 나타남
- 농어민수당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‘농어촌의 인구감소 대응’을 꼽은 것은 농어촌 인구감소 대비를 위해 농어민수당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결과임



[그림 22] 충남도 농어민수당 찬성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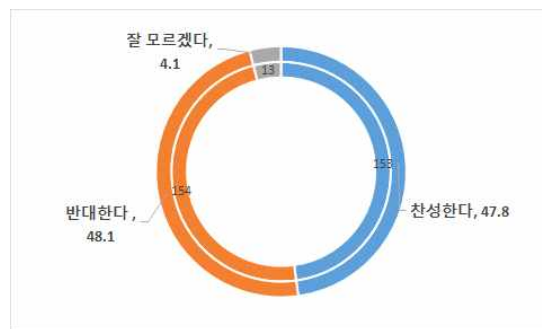
- 충남도 농어민수당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‘도시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’를 꼽음
 - 충남도 농어민수당을 반대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, ‘도시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’가 36.7%, ‘농어민에 대한 과도한 혜택’이 34.2%로 비슷하게 나타남
 - 그 외 ‘농어업의 경쟁력 상실’이 13.9%, ‘현금지원 남발’이 10.1%, ‘농어민의 근로의욕 감소’는 5.1% 순으로 나타남



[그림 23] 충남도 농어민수당 반대 이유

3. 청년수당(청년기본소득)

- 청년수당(청년기본소득)에 대해 찬반이 거의 비슷함
 -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수당(청년기본소득)에 대해 ‘찬성한다’는 응답이 47.8%, ‘반대한다’는 응답이 48.1%로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남. ‘잘 모르겠다’는 응답은 4.1%임



[그림 24] 청년수당(청년기본소득) 찬반 여부

● 청년수당(청년기본소득)에 대해 젊을수록 찬성률이 높게 나타남

- 연령에 따른 청년수당(청년기본소득) 찬반 여부를 보면, 20대는 84.8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다음으로 30대 46.7%, 40대 44.2%, 50대 41.9%, 60대 이상 29.2% 순으로 낮게 나타남
- 20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찬성률이 월등히 높은 반면 이후 30대부터는 낮게 나타났고 60대는 가장 낮게 나타나 세대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

[표 14] 연령별 청년수당(청년기본소득) 찬반 여부

구분		찬반 여부			전체	
		찬성한다	반대한다	잘 모르겠다		
연령	20대	빈도	39	7	0	46
		%	84.8%	15.2%	0.0%	100.0%
	30대	빈도	35	37	3	75
		%	46.7%	49.3%	4.0%	100.0%
	40대	빈도	34	42	1	77
		%	44.2%	54.5%	1.3%	100.0%
	50대	빈도	31	38	5	74
		%	41.9%	51.4%	6.8%	100.0%
	60대 이상	빈도	14	30	4	48
		%	29.2%	62.5%	8.3%	100.0%
전체		빈도	153	154	13	320
		%	47.8%	48.1%	4.1%	100.0%

$\chi^2=37.468, p=0.000$

● 청년수당(청년기본소득)에 대해 대학재학·중퇴/전문대졸 응답자의 찬성률이 가장 높았음

- 학별에 따른 청년수당(청년기본소득) 찬반 여부를 보면, ‘대학 재학·중퇴/전문대졸’ 응답자가 62.9%로 가장 높고, 다음으로 ‘대졸 이상’ 46.7%, ‘고졸 이하’ 41.4%로 나타남

[표 15] 학력별 청년수당(청년기본소득) 찬반 여부

구분		찬반 여부			전체	
		찬성한다	반대한다	잘 모르겠다		
학력	고졸 이하	빈도	60	78	7	145
		%	41.4%	53.8%	4.8%	100.0%
	대학 재학·중퇴/전문대졸	빈도	44	23	3	70
		%	62.9%	32.9%	4.3%	100.0%
	대졸 이상	빈도	49	53	3	105
		%	46.7%	50.5%	2.9%	100.0%
전체		빈도	153	154	13	320
		%	47.8%	48.1%	4.1%	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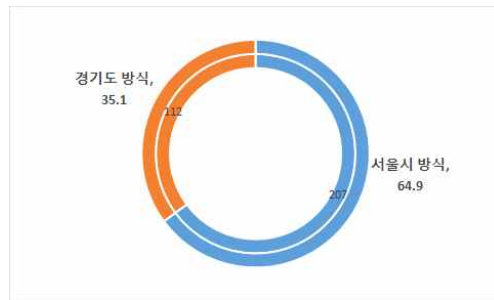
$\chi^2=9.670, p=0.046$

● 청년수당(청년기본소득) 도입 시 경기도 방식보다 서울시 방식을 더 선호

-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,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음. 이에 대해 응답자의 64.9%는 서울시 방식을, 35.1%는 경기도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

※ 참고

- ① 서울시 방식: 미취업 저소득계층 청년 선발 후 6개월 정도 집중 지원(월 50만원)
- ② 경기도 방식: 일정 연령대(예: 만 24세) 청년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(예: 연간 100만원)을 분기별로 지급



[그림 25] 청년수당(청년기본소득) 선호 방식

● 청년수당(청년기본소득) 도입 시 경기도 방식보다 서울시 방식을 더 선호

- 연령별 청년수당(청년기본소득) 선호 방식을 보면, 20대의 경우 서울시 방식과 경기도 방식이 각각 50%로 동일하게 나타남. 반면, 60대 이상의 70.8%, 50대의 69.9%는 서울시 방식을 선호해 연령이 많을수록 서울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

[표 16] 연령별 청년수당(청년기본소득) 선호 방식

구분	선호 방식		전체		
	서울시 방식	경기도 방식			
연령	20대	빈도	23	23	46
		%	50.0%	50.0%	100.0%
	30대	빈도	50	25	75
		%	66.7%	33.3%	100.0%
	40대	빈도	49	28	77
		%	63.6%	36.4%	100.0%
	50대	빈도	51	22	73
		%	69.9%	30.1%	100.0%
	60대 이상	빈도	34	14	48
		%	70.8%	29.2%	100.0%
전체	빈도	207	112	319	
	%	64.9%	35.1%	100.0%	

$\chi^2=6.170, p=0.187$

4.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의견

- 응답자들은 기본소득 실현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재정 부담을 꼽음
 - 응답자들은 상당수는 기본소득이 우리나라에서 실현되기에는 시기상조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
 - 또한 보편적 지급보다는 중소기업, 취약계층, 청년 일자리 확대에 더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
- 반면, 경제활성화, 소비촉진을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
 -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제활성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
 - 또한 일자리 감소로 인한 국민 기본생존권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
 - 기본소득에 대한 응답자의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표와 같음

[표 17] 기본소득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 및 제안

번호	제안 내용	키워드	빈도	퍼센트
1	2차지원금 지급으로 경제활성화 더 필요/소비 활성화를 위해 2차 지원 필요함/자영업자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2차 지원금 필요/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영세상인 활성화 필요/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됨/적당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됨/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함/서민들의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함	경제활성화, 소비촉진	8	7.0
2	각 각의 소외계층에 알맞은 재난지원정책 필요/각계 각 층에 맞는 재난지원금 필요/소득수준의 선별지급 필요	선별지급	3	2.6
3	공기업, 대기업과 충남중소기업 임금차이가 너무 많아서 지역에 취업을 안하려함/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지원 해주어야	중소기업 지원	2	1.7
4	국가 재정이 걱정됨/국가재정 부담되지 않는 지원정책이 되었으면 함/국가재정 부담에 대한 보완책이 철저히 마련되어야 함/국가재정에 부담되지 않아야 함/국가재정이 안정되면 지급되었으면 함/국가 재정적자 가능성이 높을 거 같음	재정 부담 우려	6	5.2
5	국민세금이 부담될 것 같아서 반대함/세금 증가 우려됨/재원마련에 따른 세금 부담증가 부작용/기본소득제가 실행되면 일하는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이 많아져서 안 됨/세금과다 납세강요 걱정됨/세금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 반대함/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 같다/세금이 늘어날까 우려됨/세금으로 국가재정을 채워나가려 할 것 같음/세금이 많이 인상될 것이 우려됨/고소득층의 소득세 인상	세금 인상 우려	11	9.6
6	국민이 잘살아야 국가도 잘사는 길인 것 같음/일자리감소로 인한 국민 기본생존권 보장필요	기본생존권 보장	2	1.7

7	금액을 늘려야함/적절한 금액을 설정해야 함	금액확대	2	1.7
8	기본소득 정책은 실시되면 안 됨/실시되면 안 됨/실시 안 했으면 /기본소득정책이 모든 국민이 잘살게 만드는 정책은 아닌 거 같 음/부의 분배는 아직 우리나라는 시기상조인거 같음/무리한 정책 은 펼치지 말았으면 함/신중하고 책임 있는 정책필요/가능한 범 위에서 신중한 정책 필요/많은 부작용이 따를 거 같음	실시 불가	12	10.4
9	기본소득에 대한 정보나 홍보가 부족함/정책홍보가 부족함	정보 부족	2	1.7
10	노동의욕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내의 금액 지급/노동의욕이 감 소되지 않는 선에서의 지원/국민근로의회 약화시키는 정책인 거 같음/전반적인 경제활력 저하가 우려됨	경제활력 저하 우려	4	3.5
11	다른지역(경기도 등) 주민들에 비해 소외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됨/지역별 격차 없이 서울경기도 수준으로 지원했으면 함/청년수 당의 전국형평성 있었으면 함	전국 형평성 필요	3	2.6
12	돈을 마련할 방안이 잘 마련되야 함/기본소득관련 돈은 있는지 궁금/주는 방법보다는 줄 수 있는 예산을 만드는 방법을 먼저 생 각해야하지 않을까/현재 국가재정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 음/현재도 나라경제가 안 좋는데 기본소득을 실시하면 위태로워 질 것 같음	현재 불가능 상황	5	4.3
13	산업구조가 격변하는 시기 새로운 소득방식이 필요할거 같음/한 국실정에 맞는 기본소득정책 검토 필요/한국에 맞는 기본소득 집 중 검토 필요	도입 검토 필요	3	2.6
14	실시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/예측할 수 없는 정책을 진행하는 건 무리인거 같음/우리나라는 아직 기본소득은 먼 미래 정책인거 같음/현재 보다 미래에 가능한 정책이니 미래를 위해 정책을 차 근히 실현해야 함	시기상조	3	2.6
15	실질적인 골목상권에서의 소비촉진 정책 필요/재난지원금 사용처 의 대기업 사용처 제한 필요	소비 촉진, 사용처 제한	2	1.7
16	어려울 때 서로 조금씩 참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야 함/ 기본소득은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만 지급해야함/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/	선택적 실시	4	3.5
17	인구가 줄고 있는 농어촌에는 사람이 없어서 힘든데 농어촌에서 일하는 사람 인건비 보조해주어야 함/형평성에 맞는 신중한 정책 이 필요/기본소득 정책은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인거 같음	형평성에 맞지 않음	3	2.6
18	재원마련 방안이 확실해야 함/재원마련을 위해 노력/재원마련을 체계적으로 해야 함/재원마련 후 시행되어야 함/재원이 확보된 후에 실시되야 함/재정마련이 어려울 듯함/재정에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의 정책이면 함/재정을 마련할 수 있을 때 시행되어야 함/ 재정이 안정적일 때 실시해야 됨/재정이 충분히 확보된 후 도입 해야 함/정책에 필요한 신중한 검토필요/정책의 실현을 위해 재 원마련을 위한 정책이 세워져야 함/정책이 가능하도록 재원마련 에 힘써야 함/충분한 재원마련 필요/충분한 재원마련에 대한 검 토가 필요/충분한 자원조달방법이 문제/충분한 검토필요 함/기본 소득 지원정책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필요함	재원마련 우선	21	18.3
19	전 국민 일괄지급으로 금액수령에 대한 불만 없애기	일괄지급	1	0.9

20	전화로 신청 가능했으면 함	전화 신청	1	0.9
21	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의견을 수렴해야할 것 같음/국민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	의견수렴 필요	2	1.7
22	정책을 결정했으면 빠르게 실현되었으면 함/지급시기를 빠르게 함	빠른 지급	1	0.9
23	지급방법을 다양하게 함/타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 지급 필요	지급방식 다양	5	4.3
24	지속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함/정기적 지원이 필요/사용기간을 늘려야함/	지속방안 마련	1	0.9
25	청년수당보다는 청년일자리 마련 필요/청년의 기본소득보다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함/청년일자리 정책 강화 필요/청년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취업할 수 있게 해야함/청년정책 확대필요/취준생을 위한 지원필요	청년 일자리 필요	6	5.2
26	최소한 서류가 간단해야함/필요한 서류 간단하게 했으면 함	서류 간소화	1	0.9
27	현금으로 한 번에 지급		1	0.9

05 결론 및 시사점

1. 결론

- 충남도민 320명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의식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

1)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항

- 첫째,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응답자 전원이 수령을 했다고 답했고, 지급 선호 방식은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 지급(40%)보다 전국민 동일 지급(59%)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
- 둘째,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찬성(62.2%)이 반대(37.2%)보다 훨씬 많았음. 찬성의 주된 이유는 '소비를 통한 경기 진작 효과 증대'가 43.2%로 가장 많았고, 반대의 주된 이유는 '국가재정의 부담'이 55.7%로 가장 많았음
- 셋째, 충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'알고 있었다'는 응답은 63.1%였고, 혜택을 받았다는 비율은 16.3%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

2) 기본소득 관련 사항

- 첫째, 기본소득(basic income)에 대해 응답자의 38.4%가 '알고 있다'고 응답했고 인지시점은 '긴급재난지원금 논쟁 때부터'가 54.5%, '총선 이후 최근 정치권의 논쟁 때부터'가 37.2%로 대부분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본소득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남
- 둘째,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비율은 46.9, 반대는 48.4%로 나타났고, 찬성의 가장 큰 이유는 '소득 불안감 해소'가 36.7%로 가장 컸고,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'국가재정의 부담'이 39.4%로 가장 많았음
- 셋째,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 '가능하지 않다'가 48.1%로 '가능하다'는 응답 37.2%보다 높았고,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 10년 내 실현이 73.2%에 달함. 또한 기본소득이 가능할 경우 적정 액수는 개인당 30만 원(25.9%), 50만 원(25.0%)로 비슷하게 나타남

3) 아기수당(행복키움수당), 농어민수당, 청년수당(청년기본소득) 관련 사항

- 첫째,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아기수당(행복키움수당)에 대해 응답자의 55.6%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87.5%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남도 아기수당(행복키움수당)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
- 둘째, 충남도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어민의 기본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2020년에 도입한 농어민수당에 대해 응답자의 45.3%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, 응답자의 70.6%는 찬성한다고 응답함. 농어민수당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'농어촌의 인구감소 대응'이 29.2%로 가장 높았고,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'도시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'가 36.7%로 나타남
- 셋째,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년수당,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응답자는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반대율이 많았음. 하지만 만약 충남도가 이들 방식을 도입할 경우 선호하는 방식은 서울시 방식으로 나타남

2. 시사점

●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

- 첫째, 충남도 긴급생활자금(추가 지급 시)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. 긴급재난지원금은 응답자의 100.0%가 수령했다고 하는 반면, 충남도 자체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응답자의 16.3%만이 수급한 것으로 나타남.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보다 집중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충남도의 이번 재난지원금은 그 수혜자가 다소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혜자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
- 둘째, 기본소득 공론화를 통해 좀 더 알릴 필요가 있음. 설문조사 결과, 기본소득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8.4%에 그쳤고 그것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논쟁, 21대 총선 후 정치권의 논쟁 때 알았다는 비율이 절대적임. 현재 기본소득이 여야 정치권에서 모두 중요 정책 의제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에서도 적극 알리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
- 셋째, 아기수당(행복키움수당), 농어민수당은 적극 확대하고 청년수당(청년기본소득)은 서울시 방식으로 점진적 도입이 필요함. 충남도 아기수당(행복키움수당)과 농어민수당은 도민들이 상당히 인지하고 있고 그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음. 특히 아기수당(행복키움수당)의 필요성은 남녀,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
- 마지막, 기본소득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 및 협의 기제 필요. 충남도 차원의 체계적인 충남도

의회는 2020년 5월 <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>을 시작했고 충남도 또한 기본소득 추진위 설치를 검토하고 있음. 따라서 이러한 연구회와 추진위(잠정)를 통해 충남형 기본소득 실시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와 추진을 위한 로드맵 제시 필요

작성자: 박경철(kcpark@cni.re.kr)

사회통합연구실 책임연구원